

레이저기기 과대광고 재심 11명 중 8명 관계기관 회부 결정 윤리위원회, 3명은 1주일 권고휴업·본지 사과문 게재키로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로 처형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윤리위)에 회부된 11명의 해당회원 중 8명이 관계기관에 회부된다. 아울러 나머지 3명은 권고 휴업 일주일과 본지 사과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9월 7일 제4차 위원회를 갖고, 관계기관 회부가 예정돼 있는 11명에 대한 재심청구 과정을 거쳤다.

이날 윤리위는 해당 회원들의 소명서와 재심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11명의 해당회원 중 8명을 관계기관에 회부토록 결정했다. 관계기관 회부가 확정된 8명 중에는 재심청구를 포기한 2명의 해당 원장도 포함된다.

관계기관에 회부되면 과대 또는 허위 광고에 따라 징계 범위가 업무 정지 1개월 또는 2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권고휴업 일주일과 본지 사과문

게재의 징계가 내려졌다. 권고 휴업 조치와 사과문 게재조치를 내린 기준에는 ▲타 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레이저 관련 판매업체와 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보였으며, 해당 지부의 의견이 참모였다. 현재 처형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수위는 경고-권리정지-권고휴업-관계기관 회부 순이다. 이날 위원들은 과대광고로 인해 치과계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치과계 전문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일간지에도 게재, 레이저 기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이번 레이저 기기 관련 사안을 치과계에서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일선 대다수 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면서 "참석한 위원들 모두가 심사숙고해 객관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협 감염방지특위' 본격 가동 교육·대정부 정책 등 4개 소위로 운영

치협 감염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광·이하 감염방지특위)가 9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감염방지특위는 최근 학계, 치협 관계자, 개원의들을 고루 포진한 가운데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9월 7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위원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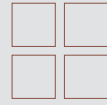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앞으로 특위 사업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위에는 감염방지분야 전문가인 오세광 위원장을 필두로 심현구 치협 치무이사가 간사로 참여한다.

또 천재식 단국치대 교수 김각근·백승호·이용근 서울치대 교수 이진웅 경희치대 교수 안용순 서울보건대학 교수 정일영 연세치대 교수 등 치대 교수진이 대거 참여, 감염방지와 관련 기초 조사와 교육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마경화 치협 상근 보험위원, 김영주·배성호 치협 보험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등은 치협 대표로 참여, 감염방지 부분과 관련해 발생하는 행위와 인력 등에 대한 비용청구 부분의 연구와 대정부 정책 활동 등을 중점 전담한다.

아울러 김응권·니춘화·박재우 원장, 최영림 서울지부 공보담당 이사 등은 개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손형식 국군 대전병원 치과부장이 참여, 군병원의 감염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치과계 감염방지 사업을 크게 ▲교육 ▲기구 및 진료실 환경개선, 진료수칙 ▲대정부 정책 ▲기자재 검증 등의 부분으로 세분화 해 4개 분야의 소위를 구성했으며 각 소위별로 위원들이 중복 포진돼 관련 업무를 중점 추진키로 결정했다.

오세광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의 경우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감염방지특위의 경우 오히려 회원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국가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만큼 이러한 책무를 다하면서 회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들도 이러한 인식하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급여 집중기관 운영 '공동협의회' 건의 치협, 국세청에

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가칭)소득공제 간소화를 위한 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치협 실무진은 9월 6일 의협, 한의협 실무진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내역 이외에 비급여 진료내역까지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집중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가칭) 소득공제 간소화를 위한 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치협은 또 ▲일부 요양기관의 준비부족으로 현행과 같이 진료비 납입확인서 제출과 병행해 실시할 것과 ▲환자 진료정보 보호차원에서 사전 동의서를 발부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것 뿐만

아니라 ▲진료내역 비밀보장 및 연말 소득공제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은 지난 8월에는 국세청에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환자진료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마련 ▲자료 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적절하다는 점 ▲현재 의료단체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포털시스템 완료 시 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정책연구소 설립·치과조무사제도 도입 방안 다각도로 연구기로 지부장회의 개최...현안사업 중점 논의

치협이 치협 산하 정책연구소 설립과 가칭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 연구에 본격 착수기로 했다.

치협은 9월 16일 치협 회관에서 전국 지부 회장들과 의장단, 감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회의를 열고 각 지부에서 올라온 치과계 현안사업을 중점 논의했다.

치협 산하 정책연구소 설립 건 등 13개 지부상정 안건이 제시된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 논란이 일었다. 산하 정책연구소 설립에 동의하는 지부회장 및 의장단은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치협이 설립을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부장회의 결의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지부회장들은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회원 동의와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치과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신중하게 연구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정책연구소 설립 문제는 치협이 태스크포스팀 등을 구성해 회원부담 감소 문제, 회원동의와 참

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연구, 대의원총회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기로 결정했다.

또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문제도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시에 명시해 도입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추진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지방 국립대 치과병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학교구강검진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복지부와 치협, 치과위생사협회 등이 공동 추진중인 영·유아·노인 구강검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울러 독감 예방 백신 수요 물량을 지부별로 파악 후 치협에서 단체 구입하기로 했으며, 부산지부에서 건의한 ▲해외무료진료봉사 활동 적극 추진 지부지원 ▲치의신보 광고 심의 후 게재 ▲치과 의사 공직진출에 대한 치협 지원 방안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